

정보보호컨설팅 10만

인력의 전략적 양성



한국통신/정보보호연구 팀장 김문규

지난 2월 정보통신 기반보호법의 국회통과로, 금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정부와 공공기관의 정보보호(Information Security) 관련 사업참여를 위한 전문업체의 지정 요건 강화로, 앞으로 국제공인 자격을 갖춘 정보보호 컨설팅 전문인력 수요가 매우 증가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과거의 단순한 웹사이트의 해킹 이나 방화벽 보안 수준에서 가상 사설통신망 (VPN), 공개 키 기반(PKI)인증, 침입탐지(IDS) 기술 등을 이용한 인터넷 데이터센터(IDC), 정보서비스 대행업(ASP)을 지향한 시스템 및 네트워크 정보보호, 정보보호 응용서비스등 기반 시설을 방어하기 위한 정보보호 통합시스템이 필수적인 요소기술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최근의 우리나라 초고속망 이용자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터넷 환경하에서의 전자상거래(EC)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며, 전자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보보호 기술의 저변확대 및 전자서명 생활화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한국정보인증, 금융결제원, 증권거래소, 한국전산원등 4대 국가공인 인증기관이 전자서명 사업을 시작한지 약 1년이 지났지만 현실적으로 전자서명 인증 제도를 이용하는 기관이나 개인 이용자들이 매우 미미한 실정이며, 앞으로 우리나라가 국내 뿐만 아니라 국가간 상호인증 기관간의 상호연동으로, 국가간 관련 정보교환 및 표준화 공동 협력을 통하여 글로벌 기업간 상거래(B2B), 개인간 상거래(B2C)등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선두주자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여야 한다.

인터넷 비즈니스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보보호 분야의 중장기적인 연구개발(R&D) 투자 못지 않게, 향후 지속적으로 5년간 약 10 만 명의 정보보호 컨설팅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표로, 인터넷 기반의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정보기술(IT) 부문의 국가간 e-Business의 성공의 가부는 정보보호 컨설팅 전문인력의 전략적 양성.확보 여부가 좌우하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부는 e-Business 활성화를 위해 단계적인 정보보호 요소기술의 개발과 정책적 정보보호산업 육성을 목표로 금년을 정보보호 원년으로 선포하고, 향후 5년간 약 3 천억을 투입하여 정보보호 공통 기반기술, 시스템 및 네트워크 보호 기술, 응용 서비스 보호 기술 등 정보보호 핵심 기술 개발 5 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부터 착수 중에 있다.

21세기를 지향하는 선진적인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정보보호 산업 육성정책 의지에 힘입어, 상·기 정책과제의 산·학·연 협동연구를 통하여 정보보호 컨설팅 전문인력을 전략적으로 양성·확보 하여야 하고, 또한 국제적으로 공인 (CISSP, GIAC 등) 되는 정보보호 전문가로 단계적으로 성장·발전시켜, 개방화 되어가는 세계 정보보호 시장 개척을 위해, 국가 정책적인 소프트웨어 수출 확대 정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 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정보보호 기술개발 5 개년 계획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약 10 만명의 정보보호 컨설팅 전문인력의 전략적인 양성 확보로, 향후 대규모 국제간 시스템 통합(SI) 프로젝트의 경쟁적 수주활동 및 공동개발 참여와 세계 5대 지식정보 강국으로 조기에 진입할 수 있는 기본환경을 갖춰 국가 경쟁력을 강화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미래 환경을 예상한, 한국통신(KT) 멀티미디어연구소는 이미, 금년 초 정보보호연구팀을 신설하여 e-Business 사업화를 위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보호 기반기술 및 응용 연구 개발 등 IT 부문의 정보보호 응용기술개발에도 선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조기 사업화 적용을 목적으로 산·학·연 중심의 협동 연구 및 인적, 기술적 정보보호 교류·협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그리하여 앞으로 다가오는 국·내외 인터넷 비즈니스를 활성화를 위한 지금까지의 연구·개발 경험을 토대로 하여, 2단계 정보보호 통합솔루션 개발과 연계하여, 향후 e-Business 의 성공적 추진을 목표로 공통 기반기술 차원의 정보보호 플랫폼 기술개발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더 나아가서 B2B 및 B2C 전자 상거래를 위한 일련의 통합 정보보호 솔루션을 제공하여 단계적인 한국통신 R&D 부문 관련사업의 매출 증대를 위해 노력함은 물론 지식기반 사회(e-Community) 조기 실현에 일익을 담당함으로써 정부 투자 공익기관으로서 성공적인 e-Business를 발굴하여 국가 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함은 물론 이를 토대로 국가 정책 사업인 전자정부(e-Korea) 인프라 건설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미래의 지식기반 정부를 지향하는 앞서가는 외국의 전자정부 추진동향을 살펴보면, 호주의 경우 고객 중심의 전자정부 전략을 이미 수립하고, 온라인 민원 서비스 포털 사이트를 준비중에 있으며, 유럽의 노르웨이 경우는 e-Norway 계획(Ver 2.0)을 지난해 발표하였으며, 미국의 경우는, 클린턴 대통령이 전자정부(e-Government) 시대 의 도래를 지난 해 선언한 바 있으나, 지난해 상반기 중에도 약 1만 4 천여회의 해킹을 당하여, 우선 시급한 것은 종합

적인 정보보호 시스템의 조기 구축이 요구된다.

또한, 우리나라는 지난 99년 7월 전자서명 법이 발효되었으나, 결론적으로 공개키 기반 (PKI) 인증서의 이용의 무화가 전자정부 조기실현의 성공의 열쇠가 될 수 있으며, 모든 민원 행정 업무의 온라인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국가 정보보호 기반 플랫폼 서비스와 더불어, 앞으로 국방, 교육, 행정망 등을 이용한 대민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여 투명한 국가 경영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